

네티즌들 지지 및 직접행동 선언 기사 -시민사회단체121+정당/정치인8-

•일시 : 2008년 8월 7일(목) 점심12시

•장소 : 청계광장

※ 기자회견 후 4개 단체가 더 참가의사를 밝혀와서 참가단체는 총 125개 단체입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4시경 삭제된 광고주 목록 게시물을 복구해 달라는 네티즌의 민사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지난 18일부터 누리꾼 소환 조사를 시작해 과잉수사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검찰은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을 벌인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에 이어 해당 카페 운영자 등 5~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미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업체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고소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이는 검찰수사의 정당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부랴부랴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 수사는 통산 고소, 고발을 토대로 하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 인지수사 형식으로 시작된다"는 검사윤리강령 10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정당성도 없고 강령까지 어기며 네티즌들의 비난이 높은 지금 검찰은 왜 과잉수사를 지속하는가. 그것은 현재 조중동 지면의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을 듯하다. 현재 조중동은 위기를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저히 줄어든 광고가 이를 말해준다. 결국 검찰의 과잉수사는 '조중동 살리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네티즌' 겁주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검찰이 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최소한 이 사안에 있어서 '검찰'의 권위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는 사실이다. 또한 이 같은 방법이 '네티즌'을 겁먹게 만들 것이라는 검찰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에 대한 지지 및 직접행동을 선언한다. 우리는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조중동에 실리는 광고목록을 각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직접행동은 언론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며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써의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을 사고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기자회견 순서>

- 지지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2008년 8월 7일

네티즌의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및 정치인

[기자회견문]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지원지"로 규정하고 광우병 괴담을 수사한다며 요란을 피우더니 최근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독", "정보전염병"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등 각종 통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놀란 가슴, 인터넷에 화풀이를 하려나 봅니다. 민심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형국입니다.

그중 최고의 진수는 누리꾼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입니다. 그간 누리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하여 조중동의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에 올려 왔습니다. 광고주 목록 게시를 통해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현하고, 왜곡언론에 광고를 게시하는 회사들을 설득하려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이라며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였고 검찰은 누리꾼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누리꾼들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수사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터넷을 탄압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리꾼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런 의도는 일부 적중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지금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 정당 및 정치인은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벌이는 누리꾼들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은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할 인권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초석입니다. 이에 우리는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함을 선포하며, 이후 일어날 탄압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8년 8월 7일

-시민사회단체 125-

강원민연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경남진보연합,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광주전남민연련, 광주전남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의힘, 금속노조울산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문예패'동지', 노동자의힘,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노리울공부방공동체미디어교육, 다함께, 대구경북진보연대(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영상공동체'이후', 대구참여연대,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독립미디어센터'창원',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문화유산정책연구소,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문화행동,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예총전북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부천시흥김 ◆ 泰仄맨츄픽 ◆ 민주노총대학노조,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안생태문화활력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통합정치연대, 서울 KYC, 서프라이즈, 성공회대학교대안언론연구실천모임'청개구리',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늘봄', 씨네오딧세이, 안산노동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사)울산노동뉴스, 울산미디어연대, 울산민예총, 울산여성회,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 울산청년회, 울산희망연대(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통일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교조전북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교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민연련,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조국통일범 ◆ 适렛 ◆ 瀾꼴뵘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참교육 ◆ 卍kV記奘 ㅁㄱ罐朝 ◆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단체'함께', 충남민주단체연대(준), 충북경실련, 통일광장, 평상필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PD연합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라!비디오로!액션v, 횡성환경연합

-정당 및 정치인 8-

최문순위원장(민주당), 강기갑의원실(민주노동당),곽정숙의원실(민주노동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실(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신당강원도당